

제369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국회사무처

2019년7월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
5.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궐선거
7.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오신환·나경원·이인영 의원 외 261인 제출) 7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오신환·나경원·이인영 의원 외 261인 제출) ... 7
 - 국무위원(통일 김연철·행정안전 진영·중소벤처기업 박영선) 인사 8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 9
5.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9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궐선거 9
7.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9
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9
 - 상임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종구·보건복지 김세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원) 인사 ... 10

(10시0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

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들리십니까?

들어 보세요,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이시나요?

보세요, 국민들의 고단하고 애절한 저 눈빛을.

말해 보세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나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 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 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시장 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자영업 몰락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고용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 양상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 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복이 없었어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등 핵심 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은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못지않게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찌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 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 실질국민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국민이 실제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또한 1.4%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지출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축률 역시 2012년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치는 퇴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한일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 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한숨이 나옵니다.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면서 89만 2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늘어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지만 이전소득만큼은 월평균 67만 3000원으로 14.2%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비록 줄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빈부격차는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실 왜곡입니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 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리려고 통계청장을 바꾼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론 호도는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67.1%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장관, 일자리수석이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고용 상황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며 반색을 합니다. 이 말이 실제 사실이라면 박수로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률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직한 정부라면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 실업률도 여전히 높아서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어렵다며 이런 사실을 말했어야 합니다.

고용의 질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올랐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는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 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35만 명이나 급증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공공 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인 삼사십 대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000명이 줄

면서 14개월이나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 같은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어불성설,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 측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000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000억 원은 재난 예방 예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 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 분야 드론 조정 인력 양성, 산업단지 환경 조성 같은 사

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 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신규 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 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한국 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물론 저성장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법 또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업과 국민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의 해법 마련도 요원해진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들여 했어야 하는 일은 기업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에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 경제가 된 것입니다.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 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앞이 더욱 캄캄해집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며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실패한 경제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또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 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

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신기술 창업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지난 1년간 하루에 4개꼴로 증가해서 현재 무려 20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와 너무나 큰 격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길거리 노점상까지 핀테크 회사들의 QR코드를 매대 위에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이 동아시아 간편결제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모바일페이의 해외 결제 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에 막혀서 겨우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뒤처지기 전에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지원 활성화와 규제 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자리란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4년간 5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젊어질 혁신 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갖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높은 노동생산성과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늦기 전에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반드시 함께 확립되어야 합니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 이외에 몇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우리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 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 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을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자진 사퇴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제실 자격이 없습니다.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 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국회에서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개입의 물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지난 13대 국회 이후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한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퇴행적인 것인지 이미 충분히 목격하셨습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락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 체제의 폐

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켜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오신환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오신환·나경원·이인영 의원 외 261인 제출)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오신환·나경원·이인영 의원 외 261인 제출)

(10시40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9년 7월 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7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7월 11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무위원(통일 김연철·행정안전 진영·중소벤처기업 박영선) 인사

(10시42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지난 4월에 임명된 신입 국무위원 세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연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김연철입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춢했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상의 평화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된 진영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988'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다양하다 보니 분야마다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큼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쪽은 활발한 반면에 새로운 시대에 온

라인 쇼핑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렵습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환하던 시대의 그 변화보다도 수십 배가 빠른 지금 전환기의 이 시대에 전환기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

5.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10시47분)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궐선거

7.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6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기구 의원, 엄용수 의원, 정점식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두 분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일괄하여 선출하는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전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건의 투표가 종료됩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50분 투표개시)

○의장 문희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2표 중 156표를 얻은 이종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2표 중 157표를 얻은 김세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2표 중 113표를 얻은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상임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종구 · 보건복지 김세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원) 인사

(11시16분)

○의장 문희상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분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종구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산자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환골탈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장엔진이 꺼져 가고 있는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부산 금정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단 한 가지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우리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계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책을 맡겨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의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우선과 협치의 정신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과					
산업통상 자 원 중소벤처 기 업	이종구	156	강길부	4	우원식	3
	홍의락	3	권칠승	2	김성환	2
	김관영	1	김기선	1	박맹우	1
	박범계	1	이종배	1	이철규	1
	이 훈	1	정우택	1	조배숙	1
	최경환(한)	1	기 권	2		
보건복지	김세연	157	기동민	4	김명연	3
	김순례	2	남인순	2	윤소하	2
	이명수	2	인재근	2	장정숙	2
	김상희	1	김승희	1	신상진	1
	유재중	1	윤종필	1	기 권	1

위원회	투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113	박용진	7	함진규	6
	윤후덕	5	조웅천	5	김수민	4
	권성동	3	김한표	3	제윤경	3
	곽상도	2	김광수	2	박홍근	2
	장제원	2	정종섭	2	김성원	1
	박완주	1	박찬대	1	송옥주	1
	안상수	1	오영훈	1	정운천	1
	조경태	1	조승래	1	지상욱	1
	최교일	1	기권	12		

○출석 의원(243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경협	김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호영	어기규	엄용수
여상규	여영국	염동열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유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수혁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임종성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전해철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정동영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우택	정성호	정양석	정용기
정춘숙	정인화	정점식	정종섭
조승래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주광덕	조원진	조웅천	조훈현
진영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최교일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재성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홍문종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철호	황영철	황희	홍익표

○개회 시 재석 의원(20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금태섭	기동민
김광림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환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재원
김정우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철민	김태흠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경미
박대출	박범계	박명재	박범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소 병 훈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희 경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여 영 국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한 홍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규 희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현	이 수 혁	이 양 수	이 용 주
이 원 옥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석 춘	장 정 숙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인 화	정 점 식	정 종 섭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원 진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 연 혜	최 윤 열
최 인 호	최 재 성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철 호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42인)

강 석 진	곽 대 훈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수 민	김 승 희	김 영 진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종 회	김 한 정
문 회 상	서 삼 석	송 석 준	유 민 봉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후 덕	이 명 수
이 수 혁	이 용 득	이 원 옥	이 인 영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배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후 삼	장 정 숙	정 인 화
정 점 식	정 춘 숙	최경환(평)	표 창 원

함 진 규 홍 문 표

○출장 의원(7인)

김 무 성	김 영 춘	성 일 중	손 금 주
오 제 세	정 태 옥	지 상 옥	

○청가 의원(39인)

강 훈 식	김 관 영	김 동 철	김 병 관
金 成 泰	김 정 호	김 종 석	김 중 로
김 태 년	김 현 권	남 인 순	민 홍 철
박 순 자	박 재 호	박 주 선	설 훈
송 갑 석	송 영 길	심 재 권	안 민 석
원 혜 영	윤 영 일	윤 호 중	이 채 익
이 태 규	이 해 찬	장 병 완	장 제 원
전 혜 숙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윤 천
정 재 호	정 진 석	조 정 식	최 도 자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주 홍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은 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외 교 부 장 관	강 경 화
통 일 부 장 관	김 연 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국 방 부 장 관	정 경 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진 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 양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개 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 윤 모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조 명 래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재 갑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진 선 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 현 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문 성 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 영 선

【보고사항】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홍일표	자유한국당	2019. 7. 5.
보건복지	이명수		

○의안 제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정우택 · 김석기 · 원유철 · 최연혜 · 이진복 · 박인숙 · 이종배 · 윤종필 · 김한표 · 김영우 · 김수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송갑석 · 이석현 · 인재근 · 고용진 · 신창현 · 홍의락 · 박정 · 박홍근 · 김태년 · 김해영 · 백재현 · 김병관 의원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송갑석 · 기동민 · 김영호 · 김종민 · 김해영 · 박정 · 박홍근 · 백재현 · 서삼석 · 이석현 · 인재근 · 홍의락 의원 발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조웅천 · 조정식 · 신창현 · 이재정 · 백혜련 · 한정애 · 김종민 · 송갑석 · 기동민 · 김영춘 · 채이배 · 표창원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조웅천 · 최인호 · 송영길 · 이동섭 · 김성수 · 신창현 · 정춘숙 · 백혜련 · 한정애 · 박정 · 채이배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윤일규 · 신동근 · 조승래 · 서영교 · 김병기 · 이석현 · 기동민 · 안호영 · 윤호중 · 정춘숙 · 안민석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정인화 · 윤영일 · 도종환 · 장정숙 · 정동영 · 장병완 · 유성엽 · 임재훈 · 채이배 · 박선숙 · 주승용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김상희 · 이규희 · 윤소하 · 정춘숙 · 맹성규 · 원혜영 · 기동민 · 한정애 · 신경민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황주홍 · 이동섭 · 김중로 · 장병완 · 안민석 · 이찬열 · 원유철 · 송옥주 · 박주현 · 이용주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추경호 · 박인숙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박맹우 · 김도읍 · 김선동 · 김용태 · 정갑윤 · 주호영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추경호 · 박인숙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박맹우 · 김도읍 · 김선동 · 김용태 · 정갑윤 · 주호영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조정식 · 박홍근 · 송갑석 · 송기현 · 전재수 · 유동수 · 맹성규 · 김현권 · 조승래 · 심기준 · 윤호중 · 박찬대 · 임종성 · 김영춘 · 윤관석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이재정 · 기동민 · 김민기 · 남인순 · 박홍근 · 백혜련 · 송갑석 · 오영훈 · 이석현 · 홍익표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박정 · 송갑석 · 신창현 · 유동수 · 이훈 · 김태년 · 어기구 · 인재근 · 남인순 · 신경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추경호 · 박인숙 · 박덕흠 · 윤종필 · 박명재 · 박맹우 · 김도읍 · 김선동 · 김용태 · 정갑윤 · 주호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윤재옥 · 유민봉 · 홍문표 · 이진복 · 안상수 · 김정재 · 김상훈 · 추경호 · 민경욱 · 박인숙 · 박명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박선숙 · 박지원 · 유승희 · 채이배 · 고용진 · 금태섭 · 박주민 · 김관영 · 인재근 · 김현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염동열 · 조경태 · 박대출 · 김성원 · 최교일 · 이철규 · 김현아 · 김석기 · 박인숙 · 민경욱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김상희 · 이규희 · 윤소하 · 정춘숙 ·

맹성규 · 원혜영 · 기동민 · 한정애 · 신경민 ·
서영교 · 김영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7. 4. 정부 제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9. 7. 4. 김병관 · 이종걸 · 송갑석 · 우원식 ·
이원욱 · 김정우 · 권미혁 · 김현권 · 홍익표 ·
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21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

(2019. 7. 5. 홍일표 의원 제출)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

(2019. 7. 5. 이명수 의원 제출)